

대선 후보 '완전국민경선' 가닥

민주 개혁 특위, 공천제도 윤곽… 당내 이견 진통 예고

총선 후보 '국민참여경선'

'현역 평가기구' 구성 논란

민주당 개혁특위가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당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총선 및 대선 공천제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특위 공천분과는 일단 대선 후보를 모바일·현장 투표를 통한 '완전국민경선'으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직을 구분하지 않고 투표를 신청한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천분과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자경심사위가 주관한 2~4배수의 후보를 놓고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 씩 참여하는 선거인단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채택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지도부의 30% 전략공천 조항을 없애고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라. 여성·청년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순회 경쟁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공천개혁안을 두고 당내 이견이 노출되는 등 최종안 마련 까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는 동원 경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록 모바일 투표라는 제도가 이를 보완하겠다지만 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마저도 조직을 동원할 경우, 동원의 폐해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꾸준하게 당비를 납부해온 당원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는 점도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적이다. 나아가 당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호남이 경선 전제를 좌우하는 불균형도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의 경우 분과위가 조기 총선 공천을 이유로 공천심사위를 대신할 예비후보자경심사위를 10월 중에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분명 요인이다. 오는 12월에 임기를 마치는 현 지도부가 차기 공천에 일정 부분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기 지도부가 총선의 모

든 공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당의 전열을 흘트리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예비후보자경심사를 하고 실질적 공천 권한은 차기 지도부가 갖는 등 공천권을 일정 부분 배분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분과위가 인지도 조사에 의한 여론의 왜곡 가능성으로 공천 개혁안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배제한 것에 대해 "(현장 투표에 의한) 국민참여경선"으로 조직동원 선거 가능성이 가장 커서 정치 신인들이 발불이기 힘든 제도"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호남 의원에 대한 물

길이를 위한 방법"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대신 전당원 투표로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호남당으로 가자는 것이나"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특위 위원은 14일 "전당원 투표 제를 도입하자면서 대선후보 선출에서 당원을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특정 계파가 당권과 대권을 잡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맞춰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당 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원 자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시작으로 21일까지 계속 회의를 열어 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상향식 공천만이 정당민주주의 완성"

나경원, 공천개혁 토론회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이 14일 초·재선 의원 40여명을 초청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천개혁안 관찰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등 당 밖에서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면 이제 당 안으로 그 무대를 옮기며 공천개혁에 막판 스퍼트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일부 현역 의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

최고위원의 공천개혁안 관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천개혁특위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상향식 공천시스템은 국민참여경선제도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해 당내에서부터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친수구역별법과 서율대법인화법 등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법안들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며 이를 진정한 정치개혁이다. 시대정신"이라며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도에 도취해 밀실·계파공천에 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辱이 지배하는 미래로 빠져들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일부 현역 의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

친수구역법 등 원상 복구 진통

여야, 날치기 강행처리 후유증 수습 관심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친수구역별법과 서율대법인화법 등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법안들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며 이를 법안에 대한 폐기안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를 법안을 각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데까지는 사실상 합의를 해준 상황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야당에 등원 명분을 주기 위해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은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만든 법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4일 "개정이라면 몰라도 이미 만든 법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절대 받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① 교육기간 : 2011.3.11(금) ~ 2011.12.16(금) : 1년과정

②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원우회 친목도모를 위한 포럼조직

③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각종선거출마예상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녀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④ 교육과정

대학 및 연설기법, 라디오/TV 스피치 요령, 각종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요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잠자 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 안에 답변방법 등

⑤ 교육요령 :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

⑥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1년 1월 31일(월) ~ 3월 3일(목)

· 등록시간 : (월) 10:00 ~ 17:00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심관 4층)

⑦ 등록방법 (수강료)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으로 입금

⑧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행사 사회진행자 추천, 월우회 월 1회 모임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FAX (062) 670-2475

지도교수 : 010-5692-9998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孫 "반민생 못 막으면 옥쇄 각오해야"

국회 등원 결정 후 다시 장외서 '희망대장정'

'영수회담 거부'와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선언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국회 등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외인 자신은 그동안 펼쳐왔던 강의 행보의 기조를 이어가며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과 물가대란, 전세대란, 실업난 등 민생 고통의 현실 앞에서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국회 등원 결단의 심경을 토로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반성을 구하기보다 우리 스스로가 민생을 책임져 달라. 나는 밖에서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종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는 등 '희망 대장정'을 이어갔다.

한편, 손 대표는 장외 행보를 하는 가운데서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선 준비에도 충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위' 위원장인 손 대표는 오는 16일 이광재 전 자사의 고향인 강원 평창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강원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또한, 손 대표는 순천과 경남 김해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의 아권연대 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정동영, 17일 강진서 복지국가 강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27회 강진 다산 강좌에서 초청 강연을 갖는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자부심과 성찰을 계승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작"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 최고위원은 또 "복지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 복지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민족과 민주의 가치를 끝에 꽂은 호남정신이 복지국가 정신으로 다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등의 복지국가 역할과 성찰을 계승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작"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근혜·이낙연 '국회 바른 언어상'

국회 의원 연구단체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14일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의 대상



박근혜 의원



이낙연 의원

격인 '으뜸 언어상' 수상자로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모범 언어상'은 민주당 이명경,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품격 언어상'은 자유선진당 변용전,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받게 됐다. 이 포럼은 국회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언어 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 위에서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발언을 모니터링 했으며, 최근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정 작업을 벌였다. 시상식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장애인 인권보장 조례 상정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민주·북구 3)과 정병문 의원(민주·비례)이 공동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또 광주시 산하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주문화관광해설사 조례안 통과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민주·광산 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주차료·입장료 면제, 교육 및 평가, 직무수행 표식 착용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아시아 문화수도이자, 2015년 하계U대회 개최를 준비중인 광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행복선거 4행시 짓기'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행복선거 4행시 짓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전남 선관위 홈페이지(<http://jn.nec.go.kr>)를 통해 참여하면 되고, 분기별로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기발하고 감동이 있는 4행시를 지어서 올려놓으면 된다. 분기별로 제출된 4행시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으뜸상(1명), 베금상(10명), 아차상(7명)을 선정하고, 연말에는 분기별 으뜸상 중 최우수상(1명)을 별도로 선정해 각각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토해양부 지정</h3